"전북 비전, 제조 결합돼야 완성"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 제조산업 결합 필요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미래 산업 전략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피지컬AI) 제조 산업의 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미래 산업 전략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피지컬AI) 제조 산업의 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전북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제조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가 전략 제조 산업의 전북 배치를 공식 제안했다.

안 의원은 오는 27일 전북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전북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북을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 비전이 실현되려면 제조 산업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산업 구조의 한계도 지적했다.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청년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매년 1만 명 가까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라며 "고임금·고숙련 제조 기반의 성장 사다리가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북의 강점 산업 고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농생명과 식품 산업을 글로벌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청년 유출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제조 산업과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전력·용수·송전망·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커지고 있다"며 "용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여건과 부지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전력 준비, 부지확보, 인허가 패스트트랙, 반도체·AI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추진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에게는 산업·전력·투자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국가 차원의 결단을 요청했다.

피지컬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증에서 양산으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이 현재 피지컬AI 실증 지역으로 다양한 실험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증만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양산 단계로 넘어가야 공장이 들어서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실증은 전북에서, 생산은 타 지역에서 이뤄진다면 산업 구조 변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피지컬 AI 전주기 제조 프로젝트를 전북에서 추진하고, 제조라인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세제 지원 및 AX 연계 제조 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재계의 대규모 지방 투자 가운데 상당 비중이 전북에 전략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의 전통산업은 계속 키우되 농생명·식품·바이오 위에 반도체와 피지컬AI 제조가 결합될 때 비로소 전북의 미래가 열린다"며 "청년이 머물고 일자리가 생기는 국가 전략 제조 거점으로 전북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의 인사 운영과 감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23일 전주 완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임시이사회 부당 인사 반복"

도내 시민단체,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규탄 나서 인사위 전원 합의 부결에도 전보 강행 등 제기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의 인사 운영과 감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23일 전주 완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과 완산중학교 학부모회, 전북지역공동은 이날 오전 11시 집회를 열고 "비리 사학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오히려 부당 인사와 보복성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부당 인사를 일삼은 임시이사회를 즉각 해임하라", "학생을 위하는 교사를 괴롭히고 횡령 교사를 옹호하는 임시이사회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학부모 대표는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은 교사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천 철회와 교육당국의 반려를 촉구했다. 완산중 박준 교사는 "학교 인사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부결한 전보안을 임시이사회가 학교장 제청 없이 강행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보 취소를 요구했다.

전북지역공동 학부모분과 관계자도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상납한 교사가 복직하고, 그 임금 보전에 4억 9,000만원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집행의 적법성 검증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공금횡령 징계 교사의 교장 자격연수 추천 문제 △비리 연루 교사 복직 과정에서의 세금 임금보전 문제 △인사위원회 전원 합의 부결에도 불구한 전보 강행 △전보 부결 이후 진행된 표적 감사 및 징계 압박 의혹 등이다.

이들은 임시이사회에 △부당 전보 즉각 취소 △교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중단 △공금횡령 교사에 대한 교장 자격연수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추천 즉각 반려 △횡령 전력자의 관리자 임용 차단 제도 마련 △임시이사회 해임 △임시 이사장 수당 지급 여부 공개 △4억9,000만원 임금보전의 합법성 조사 및 문제 확인 시 구상권 행사 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완산학원은 과거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부정채용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됐다"며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전북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주민의 삶에서 출발한 20년 생활정치, 변함없는 철학'

이명연 도의회 부의장 "선출직, 주민 의견 먼저 듣고 공감해야 하는 자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인 이명연 의원의 정치 인생은 거창한 정치적 포부보다 지역구민의 생활 속 문제 해결 의지에서 출발했다.

2004년 전주시 인후1동 시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시작된 그의 정치 여정은 어느덧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로 이어졌다.

정당 기반도 정치 경험도 없던 그는 인후1동 주민자치 위원과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며 체감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무소속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학교 주변 환경 개선과 골목길 안전 문제 등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고민이 그의 정치 시작 출발점이었다.

이후 그는 지역구 주민의 민원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당인이 되고 시의원 4선을 지내며 지역 현안을 챙겼고, 전주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다.

이어 도의회에 진출해 11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재선 도의원으로 제12대 후반기 제1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직책은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바뀌었지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는 그의 생활 정치 철학은 여전히 초지일관 변함이 없다.

그의 의정활동 중 눈에 띄는 성과는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는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전북특별자치도 종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전북의 다양한 종교 자산을 관광 자원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시 녹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최근 그는 치유 음식을 통한 전북 관광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맛의 경쟁을 넘어 건강과 회복의 가치를 담은 음식 문화가 전북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음식의 치유적 가치를 지역 자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경청의 정치'를 강조한다. 민원은 갈등이 아닌 이해의 출발점이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자체가 정치라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 때문이다.

그는 "선출직은 주민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공감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한다.

이 부의장의 정치 인생의 이면에는 가족의 희생이 컸다.

잘 나가던 정보통신 사업을 시의원이 되어 100% 정리하고 정치에만 전념하게 되어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고, 가족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정치인이 되어 여러 어려움과 조심스러운 삶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이 부의장은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소비 중심의 정치활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남기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은 청년 유출 문제를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했다.

그는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공동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 세대가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이전부터 이어온 봉사활동 역시 그의 정치 철학을 형성한 토대다.

인후1동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주시에서 여섯 번째로 인후 문화의 집을 유치한 경험은 지역 문화 접근성을 높였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정치의 본질임을 깨닫게 했다.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며 20년이 넘게 주민 곁을 지켜온 이명연 전북도의회 제1부의장은 화려함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온 생활 정치인이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발로 뛰는 그의 정치가 전북의 오늘과 내일을 더 좋은 곳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익산 위해 다른 방식으로 헌신할 것"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고향 익산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전 부지사는 "지난 10개월간 익산의 미래를 고민하며 시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제안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고향 익산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인지 밤잠을 설쳐가며 깊이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선거 국면 속에서 과열 경쟁에 참여하기보다, 한발 물러나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익산의 안정과 화합에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당으로부터 예비후보자 자격 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은 입증했으나, 현재 익산에는 경쟁 구도 속 또 한 명의 후보로 서기보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적 가교가 더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부지사는 "앞으로도 특정한 정치적 위치에 연연하기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의 미래를 응원하겠다"며 "특히 제가 가진 행정 전문성과 중앙의 네트워크가 익산의 예산 확보와 정책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기자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 현실화

익산시의회,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부결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23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따라서 어양점 운영 중단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위탁기간 동안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공공시설 운영 책임, 계약해지의 적정성, 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신청, 그리고 향후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까지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예산을 편성해 일방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2026년 예산을 전액삭감 했으며, 익산시에서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현 수탁기관의 배제 조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농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와 익산시의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협동조합에는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도의회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미래산업 투자 계획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3일 오전 도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서난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결단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주 새만금에서 관계부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번 투자가 새만금을 미래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수소·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전북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새만금이 무한한 확장성과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전초기지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신산업 도약을 이끌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김정기 도의원, 28일 '기본사회 부안' 출판기념회

부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28일 오후 2시 부안 K컨벤션웨딩홀에서 저서 '기본사회 부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김 의원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부안형 기본사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부안군의 미래비전을 지역 주민들 앞에 제안한다는 것.

특히 출판기념회에서 3부분 소개로 1부와 2부는 저자의 자전적 기록을, 1부 '나를 길러준 부안'은 상서면 동림마을에서 교육자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성장한 어린 시절부터 고향 마을의 이장으로 일했던 시절 2부는 '선출공직자의 길'에는 제8대 부안군의회 의원과 제12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온 8년간의 의정활동을 기록했다.

3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부안의 현실을 진단하며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교육 △기본서비스 △기본주거의 5대 분야로 구성된 '부안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적 재원 방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